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2035 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2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8. 일반창고업,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5. 20. ○○○○○공사로부터 'B 물류단지' 중 ○○ ○구 C 창고용 지 15,223.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6.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연면적 28,405.14m²의 5층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8. 8.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 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다.

라. 원고는 2018. 9.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2019. 10. 2.경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 2021. 5. 18.경 F과 각각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들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10.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하여 토지분 취득세 246,679,910원 및 지방교육세 21,201,050원, 건물분 취득세 387,907,540원 및 지방교육세 19,073,660원, 합계 674,862,16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D 등에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이 사건 창고를 물류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이 사건 창고를 이용하여 물류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용역 제공이 물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처분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추정규정'이라 한다)를 들고 있으나, 이는 당초 처분사유인 이 사건 경감규정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정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이 사건 추정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연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15. 5. 20. 및 2015. 11. 20.자 각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부분은 각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부과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마. 피고가 주장하는 추정사유는 취득세 신고 후 비로소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당



초 신고시 취득세를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창고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경감규정은, 원고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되, 이 사건 추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의 범위는 원고의 사업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2)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 규정 형식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추정규정을 포함한 제178조는 추정 사유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물류시설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물류



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위 법은 각종 취득세 경감규정을 두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데(위 법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등 참조) 이 사건 경감규정은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은 물류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창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류창고업의 운영형태는, 창고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수시로 입·출고하여 보관하는 화주에게 물류창고를 임대하고 화주가 직접 임차한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이른바 '임대창고' 방식과 창고업자가 단기간에 걸쳐 화물을 단순히 보관하기를 원하는 화주와 직접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물



품을 보관하는 이른바 '수탁창고'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2018. 9.경 D과, 2019. 10. 2.경 E와, 2021. 5. 18.경 F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창고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8. 10.경 주식회사 G와 건축시설물 위탁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회사에 이 사건 창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맡기기도 하였다.

③ 따라서 원고는 임대창고 방식으로 물류창고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2,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물류창고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추정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과세사유로 밝혔던 내용은 '물류창고 직접 미사용 임대'에 따른 추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경감규정은 취득세 경감만을 내용으로 할 뿐 추정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이 사건 추정규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감규정만을 처분사유로 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류창고 직접 미사용 임대'에 포함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감면 통지를 하면서 '감면의무 위반시 추정 안내'란에 '비과세(감면)후 고 유 목적외 사용, 미보유 등 감면 요건 미충족시 비과세(감면)세액이 추정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물류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은 구체적·사회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2) 정당한 사유

가) 이 사건 추정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 9978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



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 3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5. 11. 12. 주식회사 H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2. 이 사건 창고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수 차례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창고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2016. 3. 2. 이후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9. 12.부터도 약 8개월이 경과한 2017. 6.이 되어서야 비로소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 결과 2018. 6. 12.에야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준공승인이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2017. 3. 24. 및 2017. 5. 19.경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확보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건축비 대출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사이에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를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외부적,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원고와 I 사이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7. 4. 20.부터 2018. 5. 31.까지로 약 1년 1개월 정도이므로,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2016. 3. 2. 또는 실제 착공일보다 조기에 이 사건 창고의 공사에 착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창고를 완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부과제척기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제1항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납세신고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이때 조세채무를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신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2016. 9. 12.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정사유 발생일인 2017. 9. 13. 무렵부터 60일(2017. 11. 12.경) 이내에 추정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2017. 11. 13.경부터 5년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추정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

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부과에 있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원고가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정사유가 신고 후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위에서 본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추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징수대상이 되고, 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의 징수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4

재판장 판사 이○○

 판사 소○○

 판사 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4

부과처분 목록

순번	처분일	과세물건	세목	세액
1	2021. 5. 10.	○○ ○구 C 토지	취득세	246,679,910원
			지방교육세	21,201,050원
2	2021. 5. 10.	○○ ○구 C 건물	취득세	387,907,540원
			지방교육세	19,073,660원
합계				674,862,160원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5의 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 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해상화물운송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항공화물운송업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 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
	화물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물류장비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임대업, 화물선박임대업, 화물항공기임대업,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컨테이너·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 선박대여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물류컨설팅업	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 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해운부대사업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항만운송관련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예선업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종합물류 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3. 그 밖의 경우: 5년

제53조(무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4

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끝.